

Korea Development Institute for Self-Sufficiency and Welfare

KDISSW 자활정책 Brief

발행 2021년 11월 발행처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13 삼창빌딩 5층

자활사업 경로찾기

이문수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사무총장

- 자활정책 이슈 brief는 자활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정책아이디어를 시의성 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자활정책 이슈 brief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마침 우리 한국협회도 자활사업 25주년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 포럼의 주제가 자활사업 경로찾기여서 시의적절 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에는 자활복지개발원에서 지속적으로 자활정책 포럼을 추진하신 것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 전하며 발제문에 대해 간략하게 토론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발제에서 자활개념을 정리하였는데 모처럼의 접근방식이라 새삼스럽기도 했지만 그 의미를 잘 모르겠음. 자활현장에서 체험하는 자활의 개념은 사회적소외나 사회적배제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으로 나아가는 과정임. 현장친화적인 형태로 표현하면 '나'만 있는 줄 알고 나만 생각했던 주민이 자활사업을 통해 '우리'를 체험하고 우리를 생각하면서 지역사회에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나아가는 것이 자활사업이라고 자활현장은 이미 지난 경험속에 녹아들어가 있다고 판단되어짐.

탈수급률 증가 지표도 결론론적인 수치를 단순 비교한 형태로 이렇게 비교하면 현황을 파악하는데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음. 자료를 보면 탈수급률 증가로 13년 15.9%에서 19년 38.8%라고 되어있는데, 탈수급률 지표는 12년에 처음 등장하였고 기존의 자활성공률 20점을 자활성공률 15점과 탈수급률 5점으로 나누었음. 탈수급의 기준 범위도 조금씩 달라졌고, 16년도부터는 기존 자활성공률과 탈수급률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취,창업률과 탈수급을 포함한 급여변동률로 바뀌게 됨. 결론론적인 수치만 비교하고 그 수치의 기준이나 과정 등의 비교가 불충분 한 것으로 보임.

자활사업의 목적과 기능이 재논의 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마무리 하였는데 그것에 대한 논의가 충실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다만 이미 제2차 자활급여 기본계획을 골자로 보건복지부와 자활현장은 자활사업의 정책목표를 이원화하는 방향으로 논의하였고, 2021년도에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자활근로 프로그램 이원화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음. 즉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지속적인 일자리와 취,창업과 지역사회에 기여 가능한 일자리로서의 위상을 지금부터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임. 그러하다보니 공공기관인 자활복지개발원에서 자활사업의 목적에 대해 재논의 할 시점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자활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두 번째 발제는 지난 25년간의 자활사업 궤적을 정리하였는데 그 수고스러움이 느껴지는 자료임. 그 현황자료도 정책대상자, 프로그램, 전달체계, 기금과 예산 형태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유의미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임. 다만, 자활기금에서 2019년 4분기부터 자활기금 적립방식이 변경된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임.

논쟁거리 화두를 던져주었는데 자활현장에서도 지속적으로 고민되어지는 내용들임. 참여대상자의 범주, 자활사업의 지향점, 공공부조 전달체계로 머무를 것인지 사회적경제의 주체로 나아갈 것인지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지역자활센터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의 문제와 이에 따른 운영평가, 성과평가 등의 문제는 자활사업이 25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자활사업 경로를 찾기 위해 고민되어질 내용들이라고 판단되어짐. 연구가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쳐서 마무리되기를 바람.

현재 여건에서 한국협회는 제2차 자활급여 기본계획에 내면화된 자활사업의 정책목표를 투트랙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자 함. 자활현장에서 지난 20여년간 문제를 제기해 온 자활 정책목표와 정책대상자의 불일치라는 근본적인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로 보기 때문임. 따라서 사람중심의 자활사업에 의한 이원화의 방향을 정책대상자, 프로그램 별로 정립하고, 이에 따른 전달체계의 위상과 역할을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자활사업 25년의 사회적인 성과도 드러내었으면 함. 우리나라에서 자활사업이 기여한 바는 크다고 판단되어짐. 한국협회 25주년 행사 준비차원에서 역대 협회장과 사무총장들 좌담회를 개최하였는데 거기서 나온 자활사업의 의의를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자활사업은 복지와 노동을 연계하는 통합모델로서 기초법의 제정에 기여하였음.
- 자활사업은 무료간병과 시장간병을 기초로 복권기금 사업 등을 거쳐 각종 바우처사업 장기요양 등 우리나라 돌봄사업의 제도화에 기여하였음.
- 자활사업은 우리나라 사회적일자리 사업의 시초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였음.

- 우리나라 사회보장 역사에서 빈곤문제를 본격적으로 대응한 것이 자활사업의 근로연계복지 모델임.
- 자활사업은 사회적경제의 뿌리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제도화에 기여하였음.
- 기초법 초기 자활진영에서 제안하여 사회적금융의 형성에 기여한 바 있음.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적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이러한 성과에 대한 관점도 조금씩 다를 수는 있음. 최근 한국협회는 한국협회와 자활사업의 비전 2030을 구성하였는데 비전 2030의 사명을 '사회통합과 빈곤예방의 지역사회안전망 구현'으로 정리하였음. 향후 자활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되어